

▶ 매일 INDEX



4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지원 성과 '눈에 띄네'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음 9월 27일) 제3382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로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도, 내년 본예산 9조9842억 편성

올해보다 1224억 증액
이차전지산업 등 육성
전북특자도 성공 출범
지방소멸 극복 등 담아

전북도가 9조9842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대비 1,224억원 (1.2%)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8조475억원 특별회계 1조510억원, 기금 8,857억원 등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 층 보호 △이차전지 등 성장산업 육성 및 제조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미래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먼저, 전북도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미래 먹거리, 경제 신사업·구조 전환, 민생경제 회복 등에 1조2,767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는 9,786억원이 지원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편성액은 2,682억원이다.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에는 2,773억원이 투입된다. 건강·안전, SOC 등 도



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사진 가운데)가 2024년 전북도 예산안 편성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3조7,106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 사업별로는 대출금리 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특례 보

증(2,821억원 규모) 및 이차보전을 지

원하기 위해 364억원이 투입된다.

전국 최초 민관 상생의 전북형 스

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2026년

까지)에는 연간 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해 매년 100개씩 총 300개를 구

축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방위산업,

비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별도 예산이 편

성됐다.

을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인정 지원 사업도 지속된다. 전북도는 85억원을 투입해 면세유 인상분의 3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원주 상생 발굴 사업 중 하나인 '상관자수지 협력공원 조성(2026년 까지)'에도 199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어린이집 무상교육 지원 200억 원,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40억 원 투입 등도 담겼다.

타 시·도에 비해 낫다는 지적을 받아온 호국보훈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확대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려운 상황이지

만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이차전지와 같은 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포기할 수 없었다"면서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예산도 놓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0일 전북도의회에 제출된다. 이후 20일 전북도의회 제405회 임시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김 지사 "새만금 관할권 문제·특별자자체 도입 분리 추진"

김관영 도지사는 9일 본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김제시와 군산시간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해 '투트랙'을 언급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투트랙은 자체단체간 관할권 분쟁은 분쟁대로 유지하되,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해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할 부분은 협력 하자는 의미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

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인접 시군 간 개발효과 확산, 3개 시군간 교통량 증가 및 통학·통근량 확대에 따른 권역 내 생활권 강화, 역사적 동질성 회복,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등 필요성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3개 시군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설득하고 있다"며 "투트랙은 관할권 문제와 특별지방자치 단체를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김 지사는 "관할권 문제는 자치단체 간 오랜 역사성이 있다"며 "양 자치체 (김제·군산)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모두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미망에 예산을 복원하는 것도 자체단체간 합의 자체가 상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예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산시경과 김제시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자체가 거대하고 기능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도 경기 북부로 나누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상황"이며 "서울시로 더 집중하는 그런식의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단계 본격 돌입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법률 11건 중 14·15번째로
김관영 도지사, 양당 간사 직접 만나 특별법 순탄 통과 요청
전북도, 도민 서명 활동 마무리…내주 국회에 서명부 전달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인위를 통과해야 하고, 순탄한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당의 간사 의원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관영 도지사는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6일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7일 여당 간사이인 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을 잇따라 찾아 면담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11월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정부 부처 협의가 완료해 국회에 넘겨졌다"며, "부처 수용률이 높은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순탄하게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두 달간 진행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도민들의 서명 활동을 마무리하고, '100만 전북인 서명부'를 다음 주 중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림피스킨병 방역에총력

가축방역심의회 열여… 16일까지 소 농장간 이동 금지
고창 해리 한우농장 '양성' · 정읍 덕천 젖소농장 '음성'

농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4일 신고된 부안 보아면 한우농장은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전북도는 총 4건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1월 4일 도내 소 약 50만 2,000여 마리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 했으며, 흡혈곤충 집중방제를 위해 공동방제단 46개단을 편성·운영해 소독 지원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2023년도 여행은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에서

